

姜시장 “3조 마중물로 30조 대기업 투자펀드 조성”

20조 재정 인센티브 활용방안 제시
소상공인·기존 산업 지원 7조 투입
평균 연봉 5천만원 시대 기반 마련
“질 좋은 일자리 최대 50만개 목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 재정 인센티브 20조원 활용 방안으로 3조원을 마중물로 한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9일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과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해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기업 투자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직접 투자하고 스마트팜과 복합 관광타운 등 고부가 농산어촌 인프라와 성장하는 상장 기업, 지역 산업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에너지와 같은 초대형 산업 성장 엔진 확보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시켰다”며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까지 함께 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러한 투자펀드 운영을 위해 특별법 제270조에 따라 ‘대기업 투자 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성공에도 대만 정부의 직접 투자가 있었고 일본도 TSMC에 직접 투자했다”며 해외 사례를 언

급했다.

기존 창업 펀드 정책 성과에 대해 그는 “시장 취입 이후 약속했던 5천억 창업 혁신 펀드는 임기 내 조성을 완료했고 현재 6천986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다”며 “이 중 광주지역 의무 투자액 930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69개 스타트업에 486억원이 실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대기업 투자 공사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투자 수익의 일부는 지역 발전 의무 배당 형태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기존 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7조원 중 1조원을 추가 투입, 4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며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경쟁력 강화 직접 지원 사업 등에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동부권의 철강·화학 소재 산업, 서부권의 조선·농수산 가공 산업, 광주의 자동차·가전부품 산업 등 기존 산업과 위기 산업을 살리는 데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평균 임금을 약 3천800만원 수준”이라며 “기업의 질을 높이고 기업을 스마트화시키는 방식으로 평균 임금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와 관련, 강 시장은 “최소 15만 개에서 최대 50만 개까지 추정하고 있다”며 “3조원의 시드머니로 30조 펀드를 만들고 대기업과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보성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김철우 보성군수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보성 연계 농식품·문화관광 산업 키운다

광주시, 보성군 통합 상생토크
치유농업·문화유산 기반 관광 활성화
남해안권 대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광주시는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보성군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통합 이후 보성 발전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관계자, 보성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내용과 20조원 규모 정부 재정 지원이 가져올 변화를 소개하고 보성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보성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광주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치유농업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활성화 ▲광주 문화콘텐츠와 보성 문화유산을 결합한 문화관광 협력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기후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성·광주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해 농식품 산업, 관광, 문화 산업을 결합한 새

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성군민들은 질의응답에서 농업 소득 확대, 관광 활성화, 광역 교통망 연계 등에 대해 질문하며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보성의 치유농업, 농촌관광,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면 남해안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며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는 행정 중심, 동부권은 산업·경제 중심, 서부권은 에너지·관광 중심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광주구청장協 “자치구 재정보존 방안 마련해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8명에 질의서
광주구청장협의회가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물음을 던졌다. 9일 협의회는 이날 예비후보자 8명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군 단위에는 국가 보통교부세

가 직접 교부되고 있지만 자치구는 배제됐다든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구 대상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자치구가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상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와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물었다. 협의회는 오는 12일까지 회신을 당부했다. /인재영기자

도교육청, 전남·광주 통합교육 정책 발굴

16일까지 통합교육비전위원회 모집
26일 DJ센터서 발대식 공식 활동
전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교육 정책을 발굴·제시하는 가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광주 시·도민 위원 100여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교육비전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

여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속의기구로 운영된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속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도출된 정책 의제와 위원들의 제안 사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추진단에 전달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행정 통합 논의를 확대하고, 시·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형’ 교육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욱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집단 지성을 모아 통합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지역 교육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OTACOM 202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